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 209 회

제 3 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7월 5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09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1. 시정질문의 건
 - 가. 황경식 의원(일괄질문)
 - 나. 김명경 의원(일괄질문)
-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염홍철, 대전광역시교육감 김신호)
2.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장춘순)..... 2면
- 1. 시정질문의 건
 - 가. 황경식 의원(일괄질문)..... 2면
 - 나. 김명경 의원(일괄질문)..... 7면
-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염홍철, 대전광역시교육감 김신호)....13면
- 보충질문(황경식 의원, 김명경 의원) 및 답변(대전광역시장 염홍철).....24면
- 2.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32면
- 3.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2면
- 4. 휴회의 건.....33면

(10시 04분 개의)

○의장 박영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우리 시의회에 관심과 애정으로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대전

마을어린이도서관협회 회원님과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장춘순)**

(10시 05분)

○ **의장 박영교**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춘순 의사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관 장춘순** 의사담당관 장춘순입니다.

제1차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안 및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시정질문과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영교**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

가. 황경식 의원(일괄질문)

(10시 06분)

○ **의장 박영교**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두 분으로 황경식 의원님과 김명경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후에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질문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2의 규정에 의하여 본질문 20분과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각 제한시간 1분 전에 차임벨이 두 번 울리고, 제한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염홍철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경식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황경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경식 의원** 중구 제1선거구 황경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염홍철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최근 미래부와 대전시 간에 체결한 MOU와 관련하여 과학벨트 부지 매입비의 재정적 문제를 회피하려는 정부의 숨겨진 꼼수를 지적하고, 153만 대전 시민의 의견을 외면한 채 미래부의 과학벨트 수정안을 서둘러 관철시키는 대전시의 독단적인 대처와 행정력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금번 미래부가 IBS 설립부지로 엑스포과학공원을 언급한 것은 과학벨트 정상추진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책사업인 과학벨트사업을 축소하기 위한 시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지난 6월 8일 미래부의 IBS 엑스포과학공원 내 입지 제안이 있자마자 창조경제로 맞장구를 치며 미래부의 제안을 환영하였고, 대전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를 제안 받은 대전시는 일주일만인 6월 14일에 네 가지 조건을 붙여 전격적으로 수용의사를 밝히는 등 지나칠 정도로 서둘러 일을 처리한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를 전인 7월 3일 미래부와 MOU를 체결하고야 말았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역에서 우려하고 있는 사항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미래부의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떠넘기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에 체결된 MOU의 내용은 엑스포과학공원 내에 IBS를 설립하고, 당초 IBS 설립이 예정되었던 둔곡지역에는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IBS를 엑스포과학공원으로 옮기면 대전시가 현물분담을 지게 되는 것이고, 미래부는 둔곡지구의 부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공모사업도 아닌 지정 국책사업에 지방정부인 대전시가 현물분담을 지는 이것이 부지매입비 떠넘기기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씀입니까?

그 증거로 지난달 1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벨트사업의 부지매입비 전액 부담문제 때문에 당초 계획을 수정하려는 것이라고 국회에서 답변하였습니다.

이 말은 곧 대형국책사업인 과학벨트사업을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은 채 단순히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수정, 변질시키겠다는 말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과학벨트사업의 기본계획에는 전혀 결함이나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해당부처 장관이 인정하면서도 말입니다.

또한 대전시도 이를 알면서 단 일주일만에 절차를 무시한 채 성급하게 미래부의 제안에 동조하는 불쌍사나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전시가 MOU의 내용대로 IBS 설립 부지를 위해 대전시민의 소중한 자산인 엑스포과학공원을 무상임대로 현물분담하게 된다면, 대전시는 이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언급한 대로 과학벨트기본계획 수정안이 부지

매입비를 전액 국고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엑스포과학공원 현물분담이라는 제안이 맨 처음에 나왔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이를 인정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과학공원은 분명 시민들의 공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은 전혀 없이 급하게 서둘러 과학벨트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엑스포과학공원에 IBS가 설립되면 시민들의 여가 및 체험공간으로 역할해온 엑스포과학공원이 갖는 첨단과학도시 대전의 대표성과 무형의 사회적 가치 등은 훼손될 수밖에 없어 대전시민들이 체감하는 박탈감과 정서적인 반감은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

시장께서 최근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가치 중의 하나가 바로 사회적자본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IBS를 엑스포과학공원에 옮기는 것은 이러한 사회적자본의 개념과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공원을 공원으로 알고 있는 시민들의 신뢰도, 소통도, 나눔도, 참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민 공감도, 열린 행정도 아니며 오히려 지나치게 서두르는 모습에 반드시 지켜져야 할 절차와 과정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처럼 미래부의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떠넘기기가 명확한 마당에 대전시가 시민의 소중한 자산인 엑스포과학공원을 정부에 내주면서까지 미래부의 제안을 쫓기듯 수용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학벨트 기능축소 우려에 관한 사항입니다.

과학벨트기본계획에 의하면 최적의 연구환경과 정주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둔곡지구로 입지할 IBS의 규모는 약 50만 6,000㎡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MOU의 내용대로 엑스포과학공원 내로 IBS가 입지하게 될 경우 그 규모는 당초 계획안보다 절반수준으로 축소됩니다.

당초 과학벨트기본계획상의 거점지구 토지이용 구상에는 둔곡지구는 기초과학 연구원, R&D시설, 단독 및 공동주택, 연구개발서비스업, 첨단제조시설, 근린생활 시설, 학교, 공원, 녹지, 하천 등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IBS를 비롯한 과학기술인들을 위한 연구기반시설 외에도 이를 지원하는 정주시설들을 완벽하게 구축한다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IBS를 엑스포과학공원으로 옮길 경우 이러한 시설들은 연구원들에게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IBS를 제외한 모든 시설들이 계획대로 추진되니 과학벨트의 축소가 아니라고 강변하는 것이 과연 말이 되겠습니까?

단지 IBS만 지게차로 떠서 엑스포과학공원으로 옮긴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학벨트 예정지구에 달랑 중이온가속기 하나만 남는데, 과연 이것이 반 토막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만일 IBS를 엑스포과학공원으로 옮길 경우 시장께서는 어렵게 유치한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연구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정주환경은 기존의 둔곡지구보다 더 나은지 그리고 당초 목표한 과학벨트 기능에는 과연 전혀 문제가 없는지,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보셨는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전지역을 우리가 목표로 하는 세계적인 과학기술의 메카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또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체결된 MOU가 시행될 경우, 기초연구의 거점기능을 수행할 거점지구와 그 연구성과를 연계, 확산하는 기능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인 과학벨트의 기본틀이 무너집니다.

기능지구의 역할은 없어지게 되고,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것은 뻔한 일이고, 그렇다면 충청권 공조를 통해 만들어낸 과학벨트사업이 충청권 분열의 기폭제가 될 것인데 그 책임을 어떻게 감수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대전시 요구조건에 대한 미래부 수용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미래부의 제안을 바라보며 다시는 생각하기 싫은 세종시 수정안 사태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칙과 신뢰를 중시해야 하는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인 국책사업을 함부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구상단계에서부터 입지선정까지 수없이 많은 논의와 의견수렴 절차,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기본계획이 수립된 국가정책을 합당한 이유와 목적 없이 그것도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최소한의 절차도 없이 단 일주일만에 수정, 변경에 동의해줄 사업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대전시에서는 미래부에 제안한 네 가지 요구조건이 전부 수용되었다고 지금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대전시의 두 번째 요구조건인 부지매입비에 대한 전액 국고부담은 이미 거절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전시의 최초 요구조건은 ‘과학벨트 예정부지 내 부지매입비에 대한 전액 국고부담’이었는데, 미래부로 보낸 공문에는 바뀌어서 ‘과학벨트 거점지구의 기초과학 연구시설 부지매입비에 대한 전액 국고부담’, 결국 MOU의 내용에는 ‘과학벨트 거점지구 내 중이온가속기 부지는 국고로 매입’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다.

이게 무슨 말장난 하는 것입니까?

7월 3일자 대전시의 보도자료에는 이러한 MOU의 내용을 인식한 듯 대전시에
서 원래 요구한 것이 마치 ‘중이온가속기 부지는 국고로 매입’인 것처럼 또 슬그
머니 요구사항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지난 6월 19일 대전MBC 뉴스보도에 따르면 둔곡지구는 제외하더라도 신동지
구 부지매입비가 약 4,74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신동지구가 총 50만 평이고, 이중 중이온가속기 부지가 31만 평이기
때문에 MOU의 내용대로라면 미래부는 2,940억 원, 즉 3,000억 원 정도만 부담하
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것은 그동안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7,200억 원 중 50%
인 3,600억 원만 부담하겠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온 그 금액보다 오히려 600억 원이
줄어든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그나마 ‘전액 국고매입’이란 표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일부만 국고로 매입하면 뭐라 할 것입니까?

이래놓고도 대전시 보도자료에는 “부지매입비의 지방비 분담논란을 말끔히 해
소했다.”라고 과장되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전시가 IBS를 위해 엑스포과학공원 부지를 현물분담하고도 미래창조
과학부장관이 그동안 줄기차게 국고부담하겠다고 언급한 3,600억 원도 확보하지
못한 정말 엉터리 MOU인 것입니다.

이것은 대전시의 요구사항인 부지매입비 전액 국고부담이 이미 아닌 것입니다.

이래도 시장께서는 대전시의 요구를 미래부가 수용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요구조건인 사이언스센터와 과학기술인과 시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등 창조경제 핵심시설 조성과 관련해서는 민자유치는 빼더라도 국비가 1,500억 원
이 필요한 사업인데 MOU 내용에는 사이언스센터가 1,0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줄었고, 그나마 커뮤니티 공간 국고부담은 아예 언급조차 없습니다.

이것이 요구조건을 수용한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 의원은 둔곡지구의 부지매입비 때문에 이런 과학벨트 수정안이 나온
마당에 정부가 또 다른 국비를 지원할 것이라고는 애초부터 생각하지도 않았습니
다.

네 번째 요구조건인 대덕특구의 창조경제 전진기지 조성방안은 정부가 최대한
국가정책에 반영하여 국가의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

한 내용은 실체가 없는 ‘대덕특구창조경제전진기지기획위원회를 구성한다.’가 MOU 내용의 전부입니다.

이것이 요구조건을 수용한 것입니까?

이것이 국가정책에 최대한 반영한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이번 MOU는 결코 네 가지 조건을 수용한 것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MOU 체결에는 예산의 키를 쥔 기재부가 빠져 있습니다.

기재부에서는 언제든지 “나는 모르는 사항”이라고 하면 할 말도 없습니다.

과학벨트 정책 관련, 정부가 오락가락 갈지자 행보를 보인 것이 어디 어제오늘의 일입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과학벨트 수정안을 한 발도 진척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장님!

과학벨트 원안을 지켜야 합니다.

미래부와 체결한 MOU를 즉시 철회해 주십시오.

아무 결함 없는 과학벨트사업을 부지매입비가 없어 전액 국비지원을 못 하니 대전시에서 돈이 없으면 가지고 있는 땅이라도 내 놓으라는 그런 식의 갑의 입장에서 휘두르는 횡포에 끌려다니지 말고 ‘이건 아니다.’ 하면서 온 몸으로 항거하는 153만 대전시민의 시장이 되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기본계획에 문제가 없다면 원안대로 가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진정성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대한 시장님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황경식 의원 시정질문서
.....

○의장 **곽영교** 황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경 의원님 질문 있으시겠습니까.

김명경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김명경 의원(일괄질문)

(10시 27분)

○**김명경 의원** 민주당 서구 제6선거구 김명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염홍철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위 속에서도 지역의 현안사업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대전은 10년 앞, 아니 100년 앞을 좌우할 중요한 현안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께서는 153만 대전시민들의 바람을 잘 새겨서 대전의 미래를 좌우할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방안과 도시철도 2호선의 건설방식 문제 등 뜨거운 쟁점들을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런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사이, 우리의 소박한 시민들이 일상에서 작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업들은 시정의 우선순위에서 점점 멀어져만 가고 있는 듯합니다.

저는 오늘 153만 대전시민들의 지식과 정보의 원천이자 문화와 교육의 산실인 공공도서관의 건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와 공공도서관의 분관 역할을 담당해 주는 작은도서관의 지원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묻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의 공공도서관은 신축 중인 곳을 포함하여 총 23곳입니다.

우리 시의 공공도서관 수는 인구 대비 전국 최상위권에 속한다고 대전시는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의 이동과 집중도에 따른 도서관 건립이 원활하지 않아 지역별 불균형이 심하고 그에 따라 일부 지역주민들은 도서관을 통한 문화활동에 매우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생활 가까이에 도서관이 위치하는 일은 시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동안 본 의원은 도서관 신축과 지원에 대한 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이후 공공도서관 건립이 없던 우리 시는 최근 몇 년 사이 대규모 인구가 유입된 유성구 테크노밸리에 도서관 신축을 목적으로 예산을 확보 중이며 교육청에서는 테미도서관을 대체할 가칭 사정도서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도서관이 절실한 지역에서는 여전히 공공도서관의 신축은 요원한 이야기가 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큼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서구와 유성구의 새로운 택지지구 주민들을 중심으로 도서관 신축 요청이 많습니다.

특히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루어진 서구 도안지구에서는 새로운 주거공간 조성이 완성되어 가면서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방안으로 하루빨리 공공도서관이 건립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안지구에는 도서관 용지 한 곳과 문화시설용지 두 곳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도안지구 인근의 가수원과 관저동 지역의 인구까지를 고려하면 이 지역에 공공도서관을 신축하는 일은 매우 시급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토지 매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 건립은 자치구에서 부지를 마련하면 대전시가 중앙정부에 국비지원을 신청해 국비 40%와 시비 30% 그리고 구비 30%의 예산으로 이루어집니다.

도서관 건립의 부담주체가 이렇다보니 도안지구에 도서관 부지를 마련하는 일을 두고 대전시와 서구청은 서로의 눈치만 보고 있는 형국입니다.

관할구청인 서구는 부지매입 비용이 마련되지 않아 도서관 용지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이고, 대전시는 부지마련은 오로지 관할구청의 의무라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시장님!

공공도서관의 부재로 문화욕구의 갈증을 호소하는 지역이 또 있습니다.

인구 7만 2,000여 명이 거주하는 월평·만년 지역 주민들에게도 도서관 건립은 지역의 숙원사업입니다.

대전의 대표적인 인구밀집 지역인 월평·만년 지역은 세대수만 해도 약 2만 7,000세대, 학교는 초·중·고를 합쳐 모두 12개교나 됩니다.

인구 5만 명당 도서관 1관 건립을 추진 목표로 하는 대전문화예술 중장기발전 계획대로라면 이 지역은 이미 최소한 한 곳은 도서관이 건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지역 역시 부지 확보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할 구청인 서구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이유로 부지를 마련하는 일을 미루고 있고 대전시는 다른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건립의사가 없음을 밝힌 상태입니다.

지난 2008년 정립동에 어린이도서관이 들어선 이후 최근까지 공공도서관이 신설되지 않은 서구 지역은 2011년 기준으로 도서관 1관당 평균 인구가 12만 5,000명이나 됩니다.

다른 자치구 평균의 2배에서 무려 4배까지 격차가 벌어져 있습니다.

자치구간 공공도서관 1관당 사용인구를 살펴보면 동구는 3만 1,991명이고 중구는 8만 8,692명, 유성구는 6만 1,598명, 대덕구는 6만 9,813명입니다.

서구는 몇 명이나면 12만 5,000명입니다.

대전시가 목표로 하는 인구 5만 명당 1관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서구에는 여섯 곳, 중구에는 두 곳, 유성구와 대덕구에 각 한 곳 모두 10개의 도서관이 더 건립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더 공공도서관 건립 문제와 인구 밀집도에 따른 불균형 문제를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의 이동과 집중도, 그에 따른 신설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여 도서관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자치구를 설득해 부지 확보에 대한 의지를 북돋우고, 부지 확보에 따른 문제 해결을 돕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도서관 1관당 이용인구의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대전시와 서구청이 도서관 부지 마련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사이, 이 지역 주민들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문화와 교육을 향유할 기회를 갖는 일은 일상에서 점점 더 멀어져만 가고 있는 것을 시장께서는 깊이 인지하셔야 될 것입니다.

시장님!

사정이 이런데도 우리 시의 공공도서관 수가 인구대비 전국 최상위권이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구의 이동과 집중도가 심화됨에 따라 도서관 건립 요구가 많은 지역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공공도서관의 건립과 운영의 총괄 지휘자인 시장께서 도서관 건립에 왜 적극 나서지 않는 것인지, 막대한 건립비용과 인력 운영의 어려움을 핑계로 도서관 건립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바람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대전교육을 책임지고 계신 김신호 교육감께도 도서관 건립의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테미도서관이 운영을 중지한 이후 신축 중인 가칭 사정도서관이 문을 연다 해도 대전시교육청이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은 고작 두 곳에 불과해 다른 도시와 비교하면 매우 저조합니다.

타광역시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시의 경우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운영하는 도서관 수가 각각 15개와 14개로 비례하며, 대구시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서관 수가 열 곳,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수가 열두 곳으로 교육청 관할 도서관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우리 시와 시 살림 규모가 비슷한 광주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다섯 곳이나 됩니다.

또한 2011년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 자료를 보면, 교육청에서 집행한 예산부문에서도 전국의 6대 도시 중 우리 대전시는 최하위입니다.

대전시의 바로 위에 있는 5위인 광주는 1관당 15억 7,000만 원이고 대전시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차이가 나도 너무 납니다.

5위, 6위의 차이가 아니라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예산을 우리는 지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신호 교육감님!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도서관의 건립·운영은 지자체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지만 대전교육의 발전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한 도서관 건립은 교육감께서도 적극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평생교육법」 제21조에도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만큼 앞으로 대전시교육청이 공공도서관의 확충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인지 육성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막대한 건립예산과 인력 운영의 어려움 등으로 공공도서관의 건립이 어려워 생기는 문화적 공백은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켜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첫 단추를 끼우는 일은 운영비 지원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대전시 중구 태평동에 사는 시민 박 모 씨는 작은 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 씨가 주변의 뜻있는 사람들과 힘을 모아 이 일을 시작한 것은 7년 전, 어린 자녀에게 마음껏 책을 읽히고 싶은 엄마의 소박한 바람을 채워줄 공공도서관이 집 주변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그녀의 일상은 각종 기관에서 실시하는 공모전에 도전하는 일로 채워져 있습니다.

각종 도서관 사업을 진행하는 일은 물론 임대료와 공과금, 운영비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로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도서관 회원들이 보태주는 회비가 운영에 큰 힘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도서관 운영비를 모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박 씨가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이 대전시로부터 받는 지원은 도서구입비 360만 원이 전부이고,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모전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지 않고는 독서진흥 프로그램이나 독서동아리 활동 등 각종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서관 운영도 어렵습니다.

그나마도 응시할 기회가 많지 않고, 사업기간도 대부분 일회성이어서 연간 상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전문 사서를 채용해 도서관의 전문성을 키우는 일은 엄두도 낼 수 없습니다.

작은도서관은 열람실 면적 33㎡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장서 1,000권 이상이면 각 시·군·구에 등록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입니다.

공공도서관의 분관 역할을 하는 작은도서관은 주민밀착형 생활문화공간입니다.

단순히 책을 읽고 빌리는 시설이 아니라, 마을 어린이들의 놀이터이자 공부방이며, 내 아이만이 아닌 우리 아이들을 키우려는 어머니들의 내적 성장을 돕는 생활 나눔 공간입니다.

자치단체의 정책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만들어낸 공간으로 마을마다 부족한 도서관 기반을 구축하고자 시작된 풀뿌리 시민운동이자 대안공동체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대전시 각 자치구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은 총 221곳입니다.

대전시에서는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등급을 정한 후, 등급별로 시비와 구비를 각 50%씩 도서관구입비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 액수는 자치구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가장 높은 등급의 작은도서관이 받는 지원액은 연간 15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 운영의 가장 큰 어려움은 운영비를 확보하는 일이라는 것이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의 한결 같은 하소연입니다.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 매우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작은도서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예산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을 여러 차례 해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작은도서관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조례」가 지난 해 11월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조례」에는 시장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해 조성 및 설치비, 시설개선에 필요한 경비, 자료구입비 등의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진흥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도 실시한 바 있는데, 이 자리에서도 작은도서관의 운영비 지원에 대한 목소리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만들어지고 시행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현시점에도 작은도서관 지원에 변화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문고구입비가 4,000만 원 증액 지원됐고, 어린이도서관 15곳에 책 소독기가 지원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운영비는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풀뿌리 시민공동체 정신으로 만들어진 작은도서관은 이제 대전시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으니 이제는 그 테두리 안에서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제 대전시는 민간에서 뜻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들이 소외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서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시장께 공공도서관의 분관 역할을 담당해 주는 작은도서관에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요즘 우리 대전시는 대전형 사회적자본 정책모델을 세우는 일에 매우 적극적입니다.

사회적자본은 사회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공동목표를 효율적으로 추구할 수 있게 하는 자본을 이르는 말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협력과 사회적 거래를 촉진시키는 신뢰와 규범 등 사회적 자산을 포괄한 말입니다.

공공도서관을 육성하고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키는 일은 신뢰와 소통, 배려, 협력의 네트워크를 통한 무형의 자산인 사회적자본을 만드는 소중한 실천이 될 것입니다.

시장과 교육감께서는 공공도서관 육성과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본 의원이 드린 질문에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김명경 의원 시정질문서

○의장 **곽영교** 김명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장 **곽영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염홍철**, 대전광역시교육감 **김신호**)

○의장 **곽영교** 그러면 황경식 의원님과 김명경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

겠습니다.

먼저 염홍철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염홍철 먼저 존경하는 황경식 의원님께서서는 우리 시에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떠넘기기, 과학벨트 사업기능의 축소, 창조경제 핵심시설의 실체 등을 지적하시면서 많은 우려와 함께 미래부와의 협의내용에 대하여 질문과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자세히 그리고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오늘 말씀드리면서 솔직히 자괴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가 하는 정책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긴밀하게 업무를 보고하고, 조언을 듣고, 협의를 하고 있는 시의원님들께서도 이렇게 오해와 또 저희와 간극이 큰 것을 보고 정말 저희들이 노력이 많이 부족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의 답변에 앞서 근본적인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MOU의 본질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번 MOU는 과학벨트의 기본계획에 대해서 글자 하나 바꾼 것이 없습니다.

즉 과학벨트 기본계획은 그대로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둔곡지역에 들어갈 IBS를 엑스포과학공원에 그것도 규모와 기능을 그대로 옮겨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기본계획대로 시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과학벨트나 엑스포과학공원에 관련한 우리 시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과학벨트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누구는 ‘해방 이후에 최고의 국책사업을 유치했다.’, 중이온가속기가 가동이 되면 대전은 세계 최첨단 과학기술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지매입비 때문에 몇 년간 지지부진 했습니다.

과학은 특히 첨단과학은 시간입니다.

‘누가 한 달 더 빨리 기술을 개발하느냐?’ 그런데 몇 년 동안 지금 진척이 안되고 있고, 어느 것은 예산이 배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쓰지 못하는 상황까지 있습니다.

물론 어느 부분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해결하자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우리의 관점입니다.

엑스포과학공원, 존경하는 의원님들 의견이 좀 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경제적 측면만 보서는 롯데테마파크가 들어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허가를 안 해 줍니다, 미래부에서 허가를 안 해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론의, 우리 시민들의 의견분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엑스포과학공원 적자가 100억 원이 예상됩니다, 누계 적자가 10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동안 수많은 용역을 했는데 하나도 실현 가능한 용역이 없고 뭔가 공전의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래서 엑스포재창조계획을 가능한 빨리 매듭을 져야겠다는 우리 시 입장이 있다는 것을 전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자꾸 이것을 수정안이라고 하는데, 세종시는 지난번 수정안이었습니다.

‘행정타운’을 ‘과학기업타운’으로 바꾸는 수정안입니다.

내용을 본질적으로 송두리째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계획을 그대로 두고 연구소만 이 지역으로 그것도 대전을 벗어나지 않고 대전시 내에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옮기는 것이 잘 됐느냐, 잘못 되었느냐 하는 논쟁은 얼마든지 해야 되지만 본질적인 문제가 그것일진대 자꾸 과학벨트 기본계획을 흔드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하는 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황경식 의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부의 엑스포과학공원 현물 분담 제안에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떠넘기기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과 우리 시에서 수용한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분담 차원에서 IBS를 둔곡에서 엑스포과학공원 지역으로 옮긴다, 수용할 수 없습니다.

둔곡지역에 해주기로 했고 또 전액 국비 부담을 저희들이 요청하는 상황에서 그것만 똑 따다 우리 대전시 소유 엑스포과학공원에 집어넣는 것을 누가 찬성하겠습니까?

수용 못 합니다.

그러나 미래부는 이것이 절충안이죠, 어떻게 보면 운영의 묘이죠.

과학벨트, 창조경제, 엑스포 재창조를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제안을 저희들한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벨트 기본계획과 사업의 기능변화가 없고 대덕특구를 창조경제 전진기지로 조성하겠다는 것으로 우리 시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서 고려해볼 만하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4대 원칙을 제안하면서 조건부 수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 과학벨트사업이 2년간 앞당길 수 있습니다, 기초과학연

구원은.

왜냐하면 둔곡지역에 그대로 조성하려면 그것을 수용해야지요, 보상해야지요, 토목공사해야지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쪽으로 오면 바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IBS 측에서는 2년간 당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점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한 것이지 현물 분담을 덤석 받아서 손해를 자초했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기초과학연구원을 엑스포과학공원으로 옮기는 것은 과학기술의 최적의 연구 정주환경 조성포기로 과학벨트사업과 기능이 대폭 축소되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대전을 세계적인 과학기술의 메카로 만들기 위한 전략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존경하는 황경식 의원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대입니다.

이것을 활용하는 과학기술인들이 이렇게 옮김으로써 연구환경과 정주환경이 더 좋아진다고 얘기합니다.

구체적인 내용까지 전부 제시합니다, 뭐가 좋아지는지를.

저도 말씀드리면 과학벨트사업과 기능이 일단 축소가 아니다.

왜냐하면 둔곡지역의 IBS부지는 산업용지로 활용할 예정이며 그 나머지 지역은 예를 들어서 정주 또는 국제 또는 상업 모든 시설을 그대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IBS가 떠나갔으니깐 그것이 다 불필요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어떻게 IBS에 근무하는 사람은 IBS 옆에서만 살아야 됩니까?

경관 좋은 둔곡지역에서 사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을 옮겼다고 해서 집까지 같이 사무실로 따라 옮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축소도 아니고 정주·연구환경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연구시설이 과거에는 산속으로 들어갔는데 최근에는 도심으로 나옵니다.

뭐 원하신다면 세계적으로 그런 사례를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있으니깐 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분들도 인간인지라 산 속에서 연구하는 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 연구환경만 만들어주면 도심에서 하는 것이 좋잖아요.

점심시간에 나가서 좋은 곳에서 식사도 할 수 있고, 저녁에 퇴근할 때 옆에서 친구들하고 어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산속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주환경, 사는 집이라든가 이런 것도 외국사람들이 왔을 때 거기에 숙

소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산업단지로 조성하면, 산업단지가 어찌면 IBS보다도 더 활발한 주거, 상업 욕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더 활발한 활성화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축소된다든가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지금 IBS는 15개의 연구단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이온가속기와 관련된 연구단은 2개 내지 3개, 3개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기초과학연구원장님 말씀이 2개 내지 3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말씀에 따라서 2개 내지 3개는 바로 중이온가속기 옆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과학연구원이 이쪽으로 온다고 해도 중이온가속기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계적 과학자 1,000여 명이 1개월 이상 머무르고 또 가속기 관련된 연구자 또 체험하는 사람, 실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쪽에 줄을 잇게 되기 때문에 국제적인 정주 여건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또 과학벨트의 거점지구가 IBS가 입지되는 과학공원까지 확대되었다, 지금 둔곡, 신동지역 104만 평은 변함이 없다, 1평도 줄이지 않는다고 미래부하고 저희들하고 MOU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IBS는 이쪽 엑스포과학공원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확대된 것 아닙니까?

IBS가 나온 자리에는 그대로 공터로 두는 게 아니라 산업용지 또 기타 국제 인프라로 조성을 하니까 확대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과학기술인의 연구, 정주환경 조성 포기다,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아니다.’ 그러면 IBS가 이런 주장을 합니다.

IBS가 엑스포과학공원에 입주함으로써 인근의 카이스트 등 대학 또 정부 출연 연구소, 기업, 컨벤션센터, 예술의전당 등과 함께 어우러져 과학인, 기업인, 예술인들의 소통과 융합의 창조공간으로 재탄생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좋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또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창조경제 핵심시설 등의 설치로 기초연구, 응용연구 사업화가 일자리 창출로 선순환되는 세계적인 국가 신성장 거점도시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이 절대 불리한 결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MOU 체결로 기능지구의 역할이 없어지게 되어 무용지물이 되고 충청권 분열의 기폭제가 될 것인데 그 책임을 어떻게 감수할 것인가?

이 얘기는 아시죠?

우리는 거점지역인데 이렇게 됨으로써 기능지구 역할이 없어진다, 그것이 지역

갈등의 불씨가 된다.

이것은 근거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 페이스북에 충북의 모 시민단체 간부가 항의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 가지 거기도 오해가 있고 앞으로 그분이 계속 올라와서 글을 쓰실 것입니다, 좋습니다, 저희들이 있는 그대로 그분한테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IBS의 단순한 장소이동이 어떻게 기능지구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인가라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정부가 기능지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이미 발표했고 기능지구에서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예산 이런 것 때문에 속도를 못 내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뭐냐하면, 사이언스비즈플라자 구축 또 과학벨트투자펀드 조성 운용, 학·연·산 공동R&D, 과학비즈니스융합전문가 그것을 PSM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양성하는 것을 기능 중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천안에는 사이언스비즈프라자가 설치 예정이고 세종시 소재 고려대학교 캠퍼스에서는 가속기대학원을 설립할 예정이고 충북대학에는 과학비즈니스융합전문가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또 거기서는 거기대로 기능지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계속 요구하고 저희들도 옆에서 같이 공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초과학연구원이 더더욱 중이온가속기에서 나오는 연구결과가 저는 기능지구에서 더 유용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기초과학연구원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기초과학연구원의 연구단이 거기에 있는데 그것이 무슨 큰 문제가 되느냐?

그리고 제가 독일에 가서 중이온가속기연구소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기초과학연구원과 같은 막스프랑크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지도 않고 한 도시가 달라요, 비행기 타고 몇 시간 가야 막스프랑크연구소가 있습니다.

몇 시간인지 1시간인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같은 도시 안에 없습니다.

그렇게도 운영을 하는데 우리는 바로 그 옆입니다, 더더욱 대전시민 입장에서는 대전시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IBS에 엑스포과학공원 이전이 기능지구를 무용지물로 만든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맞는 얘기 같지는 않고 기능지구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도 같이 공조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부지매입비 3,600억 국비지원하기로 하고 중이온가속기만 지원하는 것으로 협약한 이유는 무엇이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존경하는 황경식 의원님, 아까 질문내용을 경청하니깐 몇 가지 조금 혼동을 하신 것같이 느껴졌어요.

뭐냐하면, 정부가 부담하는 부지매입비는 104만 평 전체에 걸친 것이 아닙니다.

기초과학연구원 부지와 중이온가속기 부지 2개만 정부가 부담하고 그것이 약 7,600억 조성비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하나는 빠져나왔잖아요, 남는 것이 중이온가속기잖아요.

중이온가속기 부지를 정부가 국고로 매입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전액 부담이라고 하는 것인데, 국고로 매입한다면 국고이지 대전시비도 아니고, 민간자본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국어학자가 해석을 해도 국고로 매입을 한다고 하면 국가 돈으로 매입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그것은 너무 단어 하나에 우리가 확대해석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협약하기를 이것은 이쪽으로 나왔으니까 신동에 있는 중이온가속기 면적이 31만 평입니다.

그리고 돈으로는 약 4,800억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조금 틀릴 수도 있지요, “이것은 국가가 매입하라.” 이것을 MOU에 구체적으로 박아놓았습니다, 그러면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50만 평 중에 31만 평이에요, 나머지는 원래도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지 않고 그것을 개발하는 개발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원래도.

그러니까 원래대로 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대전시의 요구를 미래부가 전격 다 수용했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수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4대 원칙을 처음에 얘기한 것은 정말 100%, 120% 수용도 했고, 욕심이나서 조금씩 저희들이 늘려나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공문은 처음에 4대 조건, 원칙이라고 한 것보다는 조금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첫째 요구가 104만 평 당초 계획대로 거점지구부지 줄이지 말자, 줄이지 말자고 협약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이온가속기 국가가 매입하라, 매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창조경제 핵심시설, 과학기술인 및 시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첨단과학 전시체험시설, 테크뮤지엄 등을 조성하기로 그 협약내용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창조경제 전진기지 조성 방안, 우리가 낸 것을 많이 수용해 달라, 그래서 지금 현재도 어느 정도 수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낸 여러 가지 아이디어랄까 계획이 지금 미래부 정책에 상당히 녹아들

어가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것도 맞고, 또 저희도 그런 제안을 했고.

그리고 얼마 후에 미래부에서 별도로 창조경제전진기지와 관련하여 R&D특구에 어떤 인프라를 하겠는가를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번 이것 옮기는 것하고 직접 관계가 없고 예산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거기에다 구체적으로 담지 않았습시다만 약속을 저희들이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대덕특구 창조경제전진기지기획위원회를 정부와 우리 대전시와 R&D특구와 같이 만들자 하는 것, 상당한 진전이 아닙니까?

이것이 만들어져야 계획해서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4대 원칙이 다 수용되었다, 또 이것을 말로 해서 단어 하나 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처음에 말했는데 이 단어가 이렇게 변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틀릴 수도 있지만 세상 일이 큰 줄기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사이언스센터 1,000억 지원요청했으나 500억만 반영한 이유?

맞습니다, 저희들이 1,000억 요청했습니다.

요청은 많이 해야 돼요, 깎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1,000억 달성하려고 노력하다 500억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 대신 다른 인프라를, 확실한 것은 아닙시다만 한 2,000억 규모로 해줄 것입니다, R&D특구에.

그 얘기는 뭐냐하면 정주환경 인프라 구축, 벤처창업 기업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것이 창조경제전진기지의 역할과 연관하기 때문에 미래부가 이것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는 2,000억을 여기에다 담았으면 좋겠는데 정부예산 처리규정상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500억 이상이면 예타를 통과해야 그것이 유효한데 그런 것 없이 무조건 미래부하고 우리하고 협의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절차나 관행이나 모든 분위기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들이 그런대로 현명하게 대처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커뮤니티센터 500억 지원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사실은 구두로는 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것을 요청한 바는 없습니다.

이것을 사이언스센터하고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체결한 것을 보면 액수는 안 나왔지만 과학기술인과 시민 등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내년부터 조성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성과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 마지막입니다.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한다고 하면서 창조경제전진기지기획위원회 구성하는 것을 협약내용에 담았는데 위원회 구성이 신성장 거점육성인가?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토대로 신성장 거점지구의 역할을 만들어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사업을 지금 전체 로드맵을 한꺼번에 딱 제시를 합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연구하고 또 대덕연구단지에 과학자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의 아이디어를 얻고 세미나도 하고 뭐하고 용역도 하고 해서 앞으로 만들어내야 하는데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큰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대덕에 어마어마한 인적, 물적 인프라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연구한 사람들과 연구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황경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했는데 제가 답변과정에서 혹시 용어 선택이나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면 좋은 의도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명경 의원님께서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여기도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는 김명경 의원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인식이 똑같습니다, 의지도 있습니다, 다만 돈 문제입니다.

사실은 도서관 업무는 물론 시립도서관이 구 업무예요.

그래서 중앙정부 도서관 지으라고 돈을 내려보내는 것도 못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40%를 중앙정부에서 대고 30%를 시가 대고 30%를 구가 대고 그리고 구에서 부지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부지와 30% 부담 때문에 구에서 거부해요.

그러면 우리는 구에다 대고 “당신들 도서관 정책에 대한 의지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기가 어려워요.

왜? 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니까.

여러 가지 실효성 있는 대안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싶고 김명경 의원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가겠습니다만 질문을 해주셨으니까 그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먼저 공공도서관은 23개이고 1관당 평균 인구는 6만 6,000명입니다.

김명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적으로 우리가 최상위입니다, 특·광역시

에서는.

그러나 선진국과 비교한다든지 김명경 의원님께서 제시한 그런 기준에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우리가 1989년 직할시 승격 당시 시하고 구의 공공도서관이 3개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런대로 확충은 했지만 제일 문제가 지역간 불균형이 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고 앞으로 공공도서관 건립 수요를 분석해서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인구유입이 예상되는 지역에 도시계획 수립 시에 도서관 용지를 지정하여 자치구의 부지매입비, 건립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걸리는 것이 자치구의 부담 능력입니다.

어떻든 저희들이 일이 되게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대전문화예술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서 인구 5만 명당 도서관 1개관 건립을 목표로 인구 이동과 집중도를 고려, 수요가 있는 지역에 우선 건립될 수 있도록 해당 자치구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공도서관의 분관 역할을 담당해 주는 작은도서관의 운영비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주민들에게 지식정보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밀착형 문화공간인 작은도서관 221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도서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원하고 있지만 금년도는 전년도 대비 한 4,000만 원 정도를 증액해서 한 3억 이상을 지원하고 있고 신규사업으로 어린이도서관에 책 소독기 구입비 7,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존경하는 김명경 의원님께서 2012년 11월에 대표발의해 주신 작은도서관 진흥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운영비 지원 등을 할 것이고 아까 질문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기 때문에 몇 가지 추려봤습니다.

노후된 도서관 리모델링비 또 우수도서관에 대해서 독서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차등 지원하겠고 또 지역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운영노하우를 공유하는 세미나 또 순회, 사서 담당자 전문교육, 독서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황경식 의원님과 존경하는 김명경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영교** 염홍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신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김신호** 존경하는 김명경 의원님의 우리 대전교육에 대한 사랑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서는 다른 도시와 비교해볼 때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운영하는 공공도서관 수가 적은 편이다, 그 적은 이유와 공공도서관 확충 노력 그리고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와 대전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공공도서관 건립을 언급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운영하는 도서관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적은 이유가 첫째, 2007년 12월 14일에 「평생교육법」 등 관련 법률이 개정돼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업무가 지자체로 상당 부분 이관됨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일반시민들을 위한 공공도서관 설립의 근거가 많이 약화되었고, 두 번째는 교육청의 재정자립도가 전체 예산의 10% 이하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교육재정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바 자체적으로 공공도서관 설립에 필요한 재원확보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도서관 하나 설립하려면 도서관 건립비, 부지 마련비뿐만 아니라 운영비도 필요하고 인건비도 필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 기관이 생기면 공무원 정원 확보가 우리 교육청으로서는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는 서남부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학교신설 등으로 많은 교육재정이 투입되어서 공공도서관 건립보다는 학교도서관 건립과 유지 관리에 더욱 더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더 집중하게 된 것 같습니다.

현재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298개의 모든 학교에 학교도서관을 설립 운영하고 있고 2013년부터 도서관 활성화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노후된 학교 도서관을 개선하고 그리고 학교 운영비의 4% 이상을 도서관구입비로 편성하도록 하는 등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을 위한 활성화사업에 진력했습니다.

그렇지만 존경하는 김명경 의원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처럼 시민들의 평생학습과 문화활동 그리고 학교 독서교육 지원을 위해서 중구 사정동에 유아교육진흥원을 건립하면서 동시에 가칭 사정도서관을 신축하여 올해 8월에 완공해서 시민들에게 선사 드릴까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교육부로부터 지원받는 특별교육부금 15억 원을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대전유천초등학교 부지를 내워서 거기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공동

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지금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과 정보의 원천이자 문화와 교류의 산실이며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하여 공공도서관의 건립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교육청으로서서는 아무래도 학생들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이 우선인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학교가 지역사회의 문화예술센터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크므로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도서관을 일반시민들에게 대부분 개방하고 있으며 향후 학생 수 감축 및 학교 통폐합 등으로 인해서 폐교 또는 유휴지가 발생하게 되면 학생과 일반 시민들을 위한 공공도서관 및 문화복지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실행하여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평생학습에 기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면서 새로운 각오와 열정으로 힘차게 출발한 2013년 계사년이 벌써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청사진의 완성을 위해서 상반기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를 준비하는 금번 정례회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예정된 각종 안전심의, 주요업무보고, 추경예산심의, 결산심의에서도 건설적인 고견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제시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신뢰와 만족을 주는 대전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더운 날씨에 항상 건강하시고 민의의 전당에서 대전시민 모두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소망하면서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보충질문(황경식 의원, 김명경 의원) 및 답변(대전광역시장 염홍철)

(11시 46분)

○의장 박영교 김신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황경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황경식 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황경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의원 황경식 의원입니다.

염홍철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일요일입니다, 6월 30일 염홍철 시장님께서 많은 TV토론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TJB 토론 그 다음에 KBS 대전에 오락가락 과학벨트 해법은 없나, CMB방송의 파워토론 이것 다 봤습니다, 본 의원이.

그리고 염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과학벨트 관련한 논점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말씀처럼 시의회와 대전시가 이렇게 소통이 안 되어서 논점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소통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확인 차원에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벨트 기본계획에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기본계획에 문제가 있어서 수정안이 필요하다면 이것은 당연히 얘기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심도 있는 검토와 절차를 거쳐서 타당성을 인정받아 더 좋은 수정안을 만드는 것이 분명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계획에 문제가 없다면 문제없는 원안대로 당연히 가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만일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수정안이 필요하다, 변경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괴변이 아니겠습니까?

과학벨트와 관련된 논의는 어떻게 하면 이 계획을 성공시킬 것인가 여기에 방점이 찍혀야 되는데 부지매입비를 줄이는 방법을 찾는데 논의의 핵심이 함몰되고 있습니다.

결국 돈의 문제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억지로 끼워 맞추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중앙정부의 횡포에 대전시가 굴복한 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IBS를 엑스포과학공원으로 옮기는 것 외에 기본계획을 그대로 다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축소도 아니고 변경이 아니다.

IBS가 옮기는 것이니까 IBS 옮기는 것 때문에 생기는 그 파급효과 이것은 왜 간과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정말 아쉽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 부분은 빼시고 단지 IBS만 둔곡지구에서 엑스포로 옮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생기는 다른 문제는 왜 말씀 안 하시는 것입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서는 과학벨트의 기본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없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옮겨서 장점이 있다면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착공시기를 2년 앞당기는 결과 그것밖에는 장점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대전시에서는 이번 미래부의 제안이 대전 발전에 호기라고 합니다.

과학벨트의 정상 추진, 엑스포재창조사업의 활성화, 부족한 산업용지 해소, 창조경제전진기지의 선도 역할, 두 마리 토끼도 잡기 어려운데 한꺼번에 세 마리, 네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것은 욕심이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대전시에서 뭐 했습니까?

대전시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그렇게 좋으면 과학벨트 입안단계에서 이 계획이 반영됐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몇 년간 이 과학벨트 문제가 표류하고 있을 때 대전시 공무원들은 이 정도의 아이디어도 내지 못 했다는 것입니까?

이제 와서 이것이 가장 최적의 안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까?

미래부의 직원들 능력은 그렇게 탁월하고 대전시의 능력은 형편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제안이라고 판단되는지 미래부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하지도 않은 제안을 마치 무슨 솔로몬의 지혜인 것처럼 인식하고 이유 불문하고 수용한다는 말입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대전시에서는 이번 미래부의 제안을 감히 생각하지도 못한 대단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대전 발전의 호기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미래부의 제안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대전 발전의 호기라는 자기합리화의 명분을 찾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대전시의 예를 보더라도 조그만 몇억 정도의 공사만 하려고 해도 사업을 계획하고 또 그에 따라서 수시로 발생하는 문제를 처리하다 보면 몇 년씩 사업진행을 못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일주일만에 수용한다는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조금하게 수용한 이유를 명확히 밝혀주십시오.

미래부의 최종 제안내용에 보면 “과학벨트 구축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와 관련하여 일부에서 IBS와 창조경제 핵심시설을 엑스포과학공원 내에 조성하자는 방안을 제기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일부가 누구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또한 일부의 방안제기라는 이런 표현은 수정안이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급조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미래부와 대전시는 그 이전부터 이 문제에 대한 사전교감 또는 협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부의 수정안 제안에서 대전시와 미래부의 MOU 체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20여 일입니다.

몇억도 아니고 몇십억, 몇백억도 아니고 몇천억 아니 수조의 예산이 움직이는 국책사업의 변경을 불과 20여 일만에 처리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것입니까?

마치 무슨 잘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박병석 부의장께서는 매우 신중한 분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과학벨트 수정안을 대전시에서 먼저 제안했다고 주장합니다.

관련 속기록도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번 과학벨트 수정안을 미래부가 아닌 대전시가 먼저 제안한 것이 맞는지, 아닌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마디만 더 하면 세계적 석학들을 유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을 위한 국제중·고등학교 등 교육시설이 필요할 것인데 교육감과 이 문제는 혹시 상의해 보셨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교 황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잠시 후에 듣겠습니다.

다음은 김명경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명경 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김명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의원 시간 관계도 있고요 길게 안 하고 짧게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실제로 작은도서관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 명쾌하게 해주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도서관 하나가 건립되는 데 있어서 최소는 수십 억이 듭니다, 그리

고 운영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전에 갈마도서관급 정도 하나 운영하려면 연간 13억 정도 예산이 듭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전시에서 의지가 있다면 도서관 한 곳 운영하는 비용을 도서관을 대신하는 작은도서관에 지원한다면 충분하게 작은도서관들이 뿌리 내리고 자리 잡을 수 있는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거창하게 221곳이나 되는 도서관에다 운영비를 지원하느냐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갖지 마시고 도서관 하나 운영하는데 제대로 된 도서관은 10여억 원은 드니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비를 비롯한 기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무조건 모두를 할 수 없으니까 등급도 매기고, 평점도 내려서 정말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작은도서관들을 선별하셔서 선별된 도서관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감님께도 제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교육이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은 대단히 감사한데 실질적으로 정원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도 어렵다고 하는데 본 의원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다른 광역시들은 그렇게 많은 교육청 소관의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은 정원 문제가 안 걸리고 예산 문제가 안 걸릴까?

광주 같은 곳이 다섯 곳이라고 했는데 왜, 다른 시·도도 그 이상의 운영비를 지출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의지가 있으면 도서관은 교육청에서 건립 운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유천초등학교를 도서관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에 유천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찾아보면 여러 곳이 학교 통폐합 문제라든지 부지활용 부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천초등학교에 머무르지 마시고 대전 각지에 그럴만한 공간이 있으면 찾아서 우리가 건립은 못 하더라도 운영할 수 있는, 리모델링하면 바로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주시고 특히, 월평·만년동 지역에 월평동 한 동은 이웃하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요구가

많습니다.

포괄적으로 유천초등학교에 머무르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찾아서 도서관도 운영되고 주민들의 편의와 문화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감님께서서는 본 의원 말씀에 대한 특별한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교** 김명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홍철 시장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염홍철** 존경하는 황경식 의원님과 김명경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상당 시간 신중히 얘기했는데 황경식 의원님 이해에 도움이 안 된 것 같네요.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지금 기본계획 얘기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기본계획은 한 자의 자구도 수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대해서 맞느냐, 틀리냐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는 저희가 아닙니다, 중앙정부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다만 중이온가속기하고 IBS가 있는데 또 기타 보조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IBS 옮기는 것을 기본계획 변경이라고 보신 것이고 저는 그것은 기본계획 변경은 아니고 건물의 이전이다 이렇게 본 것이 서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이 그렇게 잘 되어 있으면 왜 변경을 하느냐, 그런데 우리가 세계적인 건축가가 설계를 했습니다.

지엽적인 문제 이런 것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가 있지요.

주차 대수를 잘못 계산했다든지 뭐 이래서,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IBS가 나왔는데 왜 거기가 기능이 그대로 유지되느냐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산업용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IBS보다 산업용지에서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것은 뭐 확실하지 않지요.

그냥 IBS가 빠져나오고 그쪽이 빈 공간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용지 등으로 채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중앙정부 횡포에 굴복했다.’ 저희가 집행기관이고 의원님의 신분이 다르지만 저희들을 좀 존중해 주십시오.

150만 시민이 선출한 대전시장님이 어디에 뭐를 굴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저희들이 판단해도 그 정도면 대전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조건부 수용을 한 것입니다.

절대 횡포라고도 안 봤고, 횡포에 굴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 가지의 이익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좋다면 진작에 할 것이지 하나 잡기도 어려운데 네 개를 어떻게 한꺼번에 잡느냐?’ 그러면 저희들이 이익이라고 얘기하는 네 가지가 이러이러한 점에서 이익이 아니라고 하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네 가지 이익이 있다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한 마리 토끼 잡기도 어렵지만 열 마리를 같이 잡을 수도 있고 또 기회가 왔으면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미래부가 IBS 이전과 관련하여 일부 사람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일부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언론에서 그 주장을 하는 학자 한두 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인지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박병석 부의장님이 상당히 사려 깊고 정확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와 관련하여 발언하신 것도 그 분의 말씀을 믿고 싶습니다, 신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황경식 의원님께서 짧게 말씀하시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것이지만 박병석 의원님이 “대전시가 먼저 제안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안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러나 대전시에는 확인을 못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두 가지입니다.

본질이 뭐냐?

과연 IBS 옮기는 것에 대해서 대전시가 먼저 제안을 했느냐, 미래부가 먼저 제안 했느냐가 본질입니다, 이게 하나 있고.

두 번째, 박병석 의원님과 미래부 장·차관이면 장·차관 그분들이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가 하는 그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후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병석 의원님과 미래부의 고위당국자와의 대화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박병석 의원님의 인품으로 봐서 그분 얘기한 것이 틀린 얘기를 하셨겠는가, 그 정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분명한 것은 미래부에서 먼저 제안했습니다.

먼저 제안했다는 것을 이 발언이 있는 후에 공식 문건으로 해명했습니다.

정부에서 공식 문건으로 해명하는 것은 속임수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중에서 한 사람만 폭로하면 다 나타날 것인데, 거기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었을 텐데 어떻게 그것을 호도, 왜곡합니까?

그리고 대전시에서도 우리가 먼저 제안하지 않고 미래부가 먼저 제안했다고 자료를 냈습니다.

대전시 공무원, 수많은 공무원이 거기에 개입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이면 이미 지금쯤 누가 폭로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미래부가 먼저 제안했다, 그것을 우리가 조건부로 수용하고 여러 가지 논의과정을 거쳐서 이틀 전에 MOU를 체결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리고 박병석 의원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더 잘 아는 것도 없고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옳지 않고 그 결론이 어떻게 나든 관계가 없습니다.

지구는 돕니다.

미래부에서 먼저 제안했습니다.

김명경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은 방법론의 차이예요.

공공도서관을 줄이고 아니면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늘리자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공도서관은 공공도서관대로의 의미가 있고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대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편의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작은도서관은 보통 10평에서 30평 정도이고 공공도서관은 700평에서 1,300평 정도이고 거기에 장서 수나 시설의 내용이나 규모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명경 의원님 말씀대로 작은도서관을 더 늘리고 공공도서관을 줄인다 기보다도 현상 유지하는 것을 한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들일 용의는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말씀을 해서, 서구 출신이시기 때문에 서구 4개 도서관 운영 예산을 빼봤더니 약 13억이 드네요, 그리고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은 예산인데 이것이 상당히 부족할 것입니다.

이것도 계속 늘려줘야 되는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제대로 지원 못하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저 역시 도서관 확충은 꼭 필요하다, 더구나 대전을 품격 높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인문고전 읽기 운동도 하고 시민대학도 상당한 규모로 아주 좋은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사회적자본을 확충하려고 노력하는 그 연장선상에서 도서관 확충은 필요하다, 거기에 절대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김명경 의원님께 드리면서 답변을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교 염홍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정질문

종료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우리 제6대 의회는 지난 3년 동안 대전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민생 위주의 현장중심 활동뿐만 아니라 시정 현안에도 적극 동참하면서 내실 있는 의정을 열정적으로 펼쳐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회 의원 모두는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의 눈과 마음으로 일하는 의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실시한 시정질문은 시정과 교육발전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들께서 질문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전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시정질문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여섯 분의 의원님과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염홍철 시장님, 김신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시 11분)

○의장 **곽영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 위원회 황경식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황경식** 행정자치위원회 황경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0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변경하고 안전행정국에 안전총괄과를 신설하는 등 새로운 행정환경에 맞게 행정기구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안전총괄과와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정원을 15명 증원하고 기능직과 일반직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

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영교 황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12시 14분)

○의장 박영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의정활동 등을 위하여 7월 6일부터 7월 25일까지 20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상청에 따르면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도로, 학교 등 각종 공공시설물과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시민생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석의원 수 26인

곽영교	김인식	임재인	김경시
황경식	김종천	한근수	최진동
남진근	곽수천	안필응	김경훈
권중순	황웅상	김명경	박종선
이상태	심현영	이희재	오태진
이영옥	박정현	한영희	김창규
강영자	김동건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	염홍철
행정부시장	노병찬
정무부시장	김인홍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교통건설국장	이원종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소방본부장	김성연
인재개발원장	이강혁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공보관	김기원
감사관	최두선
정책기획관	신태동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건설관리본부장	신혜태
상수도사업본부장	황재하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	김신호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애영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형수